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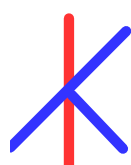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6.01.24

www.humankt.org

VOL. 28

이석채 KT호와 깊은꼴 행보를 보이는 황창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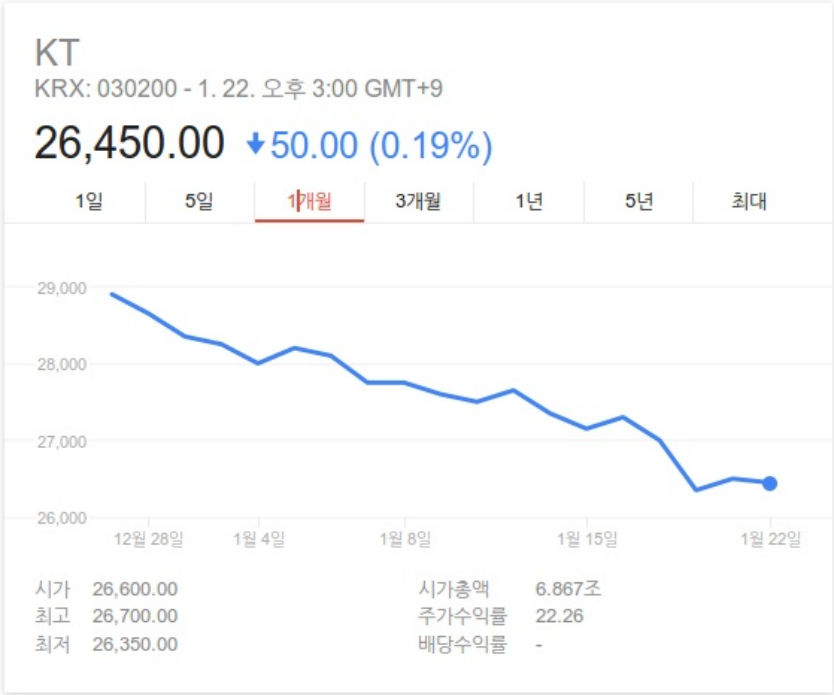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KT새노조

독자투고&제안 | newnojo@naver.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이석채 KT호와 점차 닮은 꿀 행보를 보이는 황창규 호

황창규 호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KT 노동자들 사이에서 회의감만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다. 주주는 물론 일부 증권가에서도 KT 황창규 호에 대해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KT 황창규호가 최근 강조하는 실적은 “흑자전환”과 기가인터넷 “100만 가입자 돌파” 두 개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1등 DNA’를 일깨웠다는 게 황창규 회장 스스로의 자평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보면 이 두 가지 모두 함량미달이다. 먼저 흑자전환은 사실상 이석채 전 회장 시절 BIT 실패에 따른 손실처리와 대량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비용 증가로 발생한 적자가 정상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자체가 성과라고 보기 힘들다. 실제로 황창규 회장 스스로도 자신의 성과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특별명퇴에 따른 인건비를 영업이익에서 제외하여 회계상 적자임에도 보너스 6억 5천만원을 챙긴 바 있지 않은가!

흑자전환으로 분식된 경영악화

특히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흑자전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경영악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매출, 자산 모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3년 말의 자산은 34조8천억원 규모였으나, 2015년 9월 30일 기준 자산은 31조4천억원이어서 2년 새 무려 3조4천억원의 자산이 감소되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KT렌탈 등 각종 자회사를 매각한데 따라 자산이 감소한 것. 매출도 전년 동기를 비교하면 5천억원 이상 줄어 금년에는 매출감소가 확실하다. 계열사를 제외한 KT 만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도 2014년 3분기까지 누적매출 13조2천억원에서 2015년 3분기 누적매출 12조4천억원으로 8천억원 가량 매출이 감소되었다.

크게 내세울 것 없는 기가인터넷

결국 회계처리 및 특별명퇴에 따른 일시적 적자가 정상화된 것일 뿐 회사경영상태가 나아졌다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황회장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큰 자랑 기가인터넷은 어떨까? 황 회장이 자랑하는 100만 기가인터넷 사용자는 그 수에서 각각 2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SKT와 LG유플러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100만 명 중 60% 정도는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기존 인터넷 가입자가 기가인터넷 요금제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황회장이 기가인터넷 실적을 강조하다보니 기가인터넷 전환을 둘러싸고 각종 허수실적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상하불통, 노사불신 조금도 개선되지 않아

유선강자인 KT로서는 무선 중심성이 뚜렷한 지금의 통신시장 상황에서 뚜렷한 비전이 손쉽게 제출될 수 없다. 그리고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 일변도 경영으로 골이 깊어진 경영진과 현장 직원들 간의 불신과 상하불통 그리고 정치권에 줄대기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경영진들의 행태 역시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황회장의 마지막 임기인 2016년은 더욱 힘겨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장의 눈으로 보자면 황창규 회장의 지난 2년은 사실상 이석채 경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나도는 구조조정설로 일 손 잡을 마음이 없어진 직원들의 침체된 사기, 각종 허수실적으로 강요하는 현장 관리자, 영업 현장 일선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영 의사결정 등 고질적인 경영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본사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석채는 부동산을 팔아 실적 개선을 추진했고, 황창규는 자회사 팔아서 실적 개선을 추구할 뿐 영업 현장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경영진의 연임 욕심과 미래 없는 KT의 비극

황창규 회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다름 아닌 52주 최저치를 연신 갱신하며 2만6천원대까지 주저앉은 황창규 KT호의 주가 아니겠는가? 황 회장으로서 임기는 끝나가고 뚜렷한 실적은 없고

연임할 욕심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다. 이석채 전 회장 때도 낙하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게 임기 말이지 않았나? 황 회장이 선택할 무리수는 기가인터넷 확대 등 창조경제 지원사업을 통한 정치권코드 맞추기 투자 혹은 제1노조를 앞세운 깜짝쇼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 경영진들은 연임에 성공할지 몰라도 회사는 골병이 든다. 한 현장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 진짜 사기 최악이에요. 회장이 연임을 추진하든, 정치권에 입각하든 관심 없어요. 회사 얘기라고는 구조조정 언제 있느냐는 얘기 이외에는 없어요. 직원들 사기 진작 없이, 직원들에게 주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대우하지 않는 한, KT에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 창규 호의 행보는 점차 이석채 호와 닮아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쩌면 황 회장을 포함한 KT 경영진의 연임은 권력코드 맞추기 혹은 깜짝 실적용 구조조정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 달려 있는 것일지 모른다. KT새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듯, 껍데기뿐인 다수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진정한 현장과의 소통 말이다.

노동법 개악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노동법 개악 양대 지침 발표

노동법개악을 둘러싼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했던 노동법 개악 시도가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저항에 밀려 표류하자 급기야 정부가 직접 나서 정부지침(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선 것. 이에 반발하여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조차 노사정위 합의 파탄을 선언했고 노사정위 탈퇴 및 이후 대정부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간제법을 양보(?)할테니 나머지 노동관련 법을 1월중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법 개악을 위해) 국민이 나서달라”고 한마디 하자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중심이 되어

“경제 활성화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이 스스로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두고 '관제서명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법안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상적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통상)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고,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법을 노동자들이 서명해서 국회에 청원하라는 셈인 이번 서명운동은 이미 각 기업에서 강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KT에서도 이런 서명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을 둘러싼 서명운동, 자기를 죽이는 법안에 스스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이 지독한 역설은 단순한 노동법 개악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쉬운 해고 도입

이번 정부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해고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통상(일반)해고의 경우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 KT에서는 저성과자관리 프로그램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했다. 상품판매 전담팀, CP프로그램, CFT(업무지원단) 등 매시기별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잔류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왕따를 강요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해 저성과자로 내몰고, 이것이 누적되면 경고 징계 원거리 발령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지 않았던가! 그 결과로 많은 KT노동자들이

극도의 무기력감과 우울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곧 심각한 근로의욕 저하와 KT 특유의 상명하달만이 존재하는 침체된 기업문화를 불러오면서 KT의 기업이미지를 최악의 인권탄압 기업으로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대로 쉬운 해고가 도입된다면 이는 고용계약 자체가 무의미한 사실상 회사 측이 전체 노동자를 마음껏 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취업규칙도 회사 맘대로 개악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KT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지금까지는 각종 복지를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다수노조의 합의를 반드시 필요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고과 연봉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번 노동부 지침이 확정되면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근로조건 개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내세우면 노사간 맺은 모든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파장 또한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젠 노골적으로 재벌 편들기에 나선 정부가 노동법 양대지침 발표를 강행하면서 향후 정국은 다시 가파르게 노동자를 투쟁의 길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이토록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해가며 노동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경기가 하락하고

기업의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만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노동법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자를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가 폭력 그 자체이다.

이는 동시에 노동조합은 이제 단순히 기업 내에서 근로조건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물론 KT노조처럼 기업 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조차 못 지키는 어용화된 노동조합도 문제이지만, 보다 시야를 넓혀 국가입법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에 노동자들이 맞서야 한다. KT새노조는 이러한 사회운동과 연대하는 노동조합을 지향한다. 이제 KT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의 본래 존재 의미인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연대에 진지한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할 때인 것이다.



재앙이 예고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 통신에 이어 방송마저 재벌에 장악될 위기

작년 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각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사업영역을 지역케이블 방송과 알뜰폰(MVNO) 사업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은 가입자 450만명, 알뜰폰 가입자는 87만명으로 두 사업 모두 업계 1위다. 이를 인수하려는 SK텔레콤은 점유율 50%에 달하는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동시에,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유선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이동통신(1위)-초고속인터넷(2위)-IPTV(2위)-케이블방송(1위)을 아우르는 거대 방송통신 사업자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지역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케이블방송 특징 상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1일, SK텔레콤이 인수 합병 인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수합병을 심의 중에 있다. 3개 정부부처가 분리해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벌 거대 방송통신사업자 출현”을 경계하는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인 심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SKT - CJ헬로비전 합병은 독점을 강화하고 독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

현재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 시장의 50%에 달한다. 무선이 통신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SK텔레콤의 무선 독점은 결합할인을 통해 유선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고가 요금제 2회선이면 인터넷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식의 마케팅을 하는 것.

※ 미래부 유선통계자료 재구성

구분	초고속인터넷 누적가입자(천명)							가입자 점유율(%)							'09년대비 M/S변화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4월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4월	
KT	6,953	7,424	7,823	8,037	8,067	8,129	8,185	42.5%	43.1%	43.8%	44.0%	43.1%	42.4%	42.3%	-0.3%p
SK群	SKT	0	403	898	1,326	1,727	2,061	2,169	0.0%	2.3%	5.0%	7.3%	9.2%	10.8%	11.2%p
	SKB	3,847	3,599	3,294	3,068	2,842	2,750	2,735	23.5%	20.9%	18.4%	16.8%	15.2%	14.4%	-9.4%p
	소계	3,847	4,002	4,192	4,394	4,569	4,810	4,905	23.5%	23.2%	23.5%	24.1%	24.4%	25.1%	1.8%p
LGU+	2,522	2,773	2,810	2,743	2,928	3,014	3,063	15.4%	16.1%	15.7%	15.0%	15.6%	15.7%	15.8%	0.4%p
SO	3,027	3,025	3,035	3,079	3,174	3,209	3,213	18.5%	17.6%	17.0%	16.9%	16.9%	16.7%	16.6%	-1.9%p

문제는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와 같은 결합 마케팅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방송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현재 케이블사업자(SO사업자)의 이동통신 +케이블방송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비중은 0.5%에 불과하여, SK텔레콤 입장에서 볼 때 1,500만 케이블방송시장은 무주공산이나 다름 없다. 이를 토대로 점차 2,500만 유료방송 시장도 장악해 나갈 것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우려이다.

["이동전화+방송+초고속"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2013.9	2013.12	2014.3
KT	가입자수	1,122,704	1,178,365	1,222,418
	비중	45.4%	41.8%	38.5%
SK	가입자수	933,104	1,103,326	1,275,691
	비중	37.7%	39.1%	40.2%
LG	가입자수	418,361	522,769	656,738
	비중	16.9%	18.5%	20.7%
SO합계	가입자수	839	16,549	17,181
	비중	0.0%	0.6%	0.5%
결합 합계	가입자수	2,475,008	2,821,009	3,172,028

※ 출처 : KISDI,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14년)"

독점은 소비자 권익의 침해와 직결된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간 인수합병을 불허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다. 미국에서는 이동통신 2위 AT&T가 4위 T-모바일 인수를 시도했으나 정부에 의해 거부된 사례가 있었으며,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컴캐스트가 2위 타임워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FCC(연방통신위원회)를 의식해 시장 점유율 30%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규제기관 및 사업자간 M&A 불허 현황>

구분		내용
규제기관	FCC	- 이용자 이익 저하 등 공공이익 저해
	EU	- 요금 인상 /이용자 선택권 축소
	호주 정부	- 시장 집중화 우려/투자 축소
	호주 정부	- 요금인상(고령자/어린이/청소년 등 요금 36% 인상)
	브라질 통신부	- 기업효율성보다 시장 독점 우려가 더 커
	스페인 CNMC	-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인프라 개방요구
	남아프리카 공화국 ICASA	- 시장 경쟁제한 - 투자 축소 우려
M&A 불허 사례	알티스-케이بل비전	- 기업 몸집 키우기 M&A 반대
	차터-타임워너	
	타임워너-컴캐스트	- 소비자 이익 저해
	OI-TIM	- 합병대신 정부 부채 지원 검토
	THREE-O2	- 합병 불허 가능성
	텔렌노이ASA-텔리아	
	소네라	
언론및 보고서	BT-EE	
	NYT	- M&A가 소비자 피해와 소득불평등 악화 초래 - 경제 역동성 복원을 위해 대규모 M&A 규제 강화 필요
	The European Antitrust Review 2016	- 경쟁 처방 없는 합병 허용반대 - 작은 시장의 성공적 경쟁이 큰 시장의 경쟁력확보방안
	The Economist	- 미 규제 당국이 그동안 일부 M&A만을 거부한 것은 문제 - 정부는 경쟁 자체를 촉진해야
	FT	- 경쟁 훼손하는 통신사 합병리스트 우려
	WSJ	- 사업자 축소 경고

또한, 호주에서는 2013년 통신사 합병으로 사업자가 감소한 이후 이동 통신 요금이 8% 인상 되었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청소년의 요금은 36% 인상 되었다. 따라서 이번 SK텔레콤의 CJ 인수합병은 독점심화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불승인 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인 것이다.

케이블 방송이 재벌에 넘어가면 방송공공성이 침해된다

CJ헬로비전의 태생은 여러 개의 지역 방송사업자들의 연합이다. 이 지역방송 사업자들은 자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SK브로드밴드의 IPTV와는 다른 성격이다. IPTV에는 자체 방송채널이 없다. 따라서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 SK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이 채널을 활용 하는 것도 충분히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더구나 한국식 재벌 기업 구조에서는 소위 'CEO 리스크'가 사회 문제이지 않은가. 그래서 국민여론은 엄정한 공공성을 요구받는 방송업계에 재벌이 진출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최태원 회장은 회사 돈을 불법으로 사용해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최 회장 스스로가 내연녀와 혼외자를 갖고 있다고 고백했으나, 이 과정에서 내연녀가 소유한 아파트를 SK 해외계열사에서 고가에 사들여, 수 억원의 차액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SK그룹, '회장님 그분' 금감원 조사에 긴장 고조...최태원 회장 '은둔 경영' 돌입

입력 : 2016.01.18 06:00 | 수정 : 2016.01.21 11:23



▲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우). / 디자이너 = 김연수

작년 연말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의 '편지 고백' 파문이 새해 들어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SK그룹 이미지가 추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최근 최 회장의 내연녀 김모(41)씨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18일 최 회장과 김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회사의 공적 자산을 재벌오너가 개인재산처럼 멋대로 전횡하는 한국의 기업 현실에서 방송이 재벌에 넘어갔을 때 사회적 리스크는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재벌의 방송참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SK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 없는 합병승인 반대한다

현재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에는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이 담당하는 개통, AS 등의 업무는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업계는 비용절감을 들어 이를 모두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도 아직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 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유류비, 통신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원청 회사는 이들에게 SK브로드밴드 유니폼을 입히고, 원청의 복무 메뉴얼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양사의 서비스 지역 중복을 중심으로 엄청난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이다. 그리고 이것이 통신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불보듯 뻔하다.

<표> 케이블방송업체 간접고용/비정규직 현황

	전체 인원	원청		협력업체	
		인원	비율	인원(업체수)	비율
티브로드	2,277	678	29.8%	1,599(47개)	70.2%
CJ헬로비전	3,245	1016	31.3%	2,229(36개)	68.7%
씨앤엠	1,713	684	39.9%	1,029(24개)	60.1%
현대HCN	1,335	429	32.1%	906(27개)	67.9%
씨엠비	817	478	58.5%	339(22개)	41.5%

※ 2013년 최재천 의원실 방통위 요청 자료 재구성

현재 SK브로드밴드에는 90여개 협력 업체, 4천여 명, CJ헬로비전은 36개 협력 업체, 2천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 6천여명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이 논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지역사회 방송 산업에 기여하는 바를 감안하면, 합병 후 고용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결 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방송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KT새노조는 참여연대, 경실련, 언론노조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인수합병을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정부당국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KT새노조와 함께해요!

▷ **KT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T새노조 규약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KT에 근무하는 직원과 통신 관련 산업 및 이에 관계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 ① KT새노조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
KT새노조에 보낸다~

 메일 : newnojo@naver.com

※ 보내주신 신청서를 KT새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② 조합비를 납부한다~

납부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가입 형태	조합비	기타
KT새노조 조합원	4만원/월	기존 KT노조(제1노조)는 탈퇴 처리됩니다.